

# 尹측 '부정선거론' 또 꺼내자...국회측 "쟁점 아니니 제한"

###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 방치 어려워...계엄 선포 사유에도 없어” 증인신문대 尹대통령 퇴거 요청도...헌재 “재판부 평의 거칠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재차 제기하자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변인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피청구인(尹 대통령)을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의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관인이 문개진 투표지 사진이나 투표지 보관소의 문고리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등도 부정 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부정선거론 관련 주장

을 이어가자 국회 측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 관련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아울러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혐직 군인들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증인 간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앞으로 심

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면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피청구인이 퇴장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거나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측 요구에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국회 측의)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선거가 전부 부정인 거 아니냐”며 “다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헌재서 재생된 '계엄의 밤'...계엄군 CCTV 영상서 눈 못 떼면尹

### 증거조사...국회측 “미리 준비된 계엄군...추가계엄 시도 모습” 변론종료 전尹 발언 “국회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을 운명의 탄핵 심판대에 서게 한 12·3 '계엄의 밤'이 담긴 영상이 21일 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생됐다.

탄핵 소추단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3차 변론에서 작년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이들 영상에는 3일 밤 11시 50분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정문출입이 가로막힌 계엄군이 유리창

을 깨뜨려 진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렇게 진입에 성공한 계엄군이 국회 내부를 분주히 뛰어다니거나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팔을 흔들며 뒤로 물러서다 대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선관위 과천 청사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3분께 계엄군 10여명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4-5분 후에 바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할 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CCTV 영

상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 전화를 넘겨받는 모습도 담겼다.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에게 손바닥을 펼치면서 흔들자 직원은 곧 잡음을 풀고 휴대 전화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이 밖에 선관위 선거연수원 건물에 경찰이 모여 출입을 통제하다 이튿날 동이 튼 뒤인 오전 7시를 넘어서야 경찰차와 함께 빠져나가는 모습도 재생됐다.

국회 측은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기록 뒤인 4일 오전 1시 42분께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서는 모습도 CCTV 영상으로 재생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된 뒤에도 군 병력이 의장 공관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 계엄을 시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닐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이날 CCTV 제출 증거 가운데 16개를 부분적으로 재생했으며, 1개 CCTV 영상에서 여러 지점을 재생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24개 지점의 영상을 보여줬다.

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CCTV 영상을 응시한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전 발언이 튼 뒤인 오전 7시를 넘어서야 경찰차와 함께 빠져나가는 모습도 재생됐다.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해를 주지 않은 경고 차원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있었던 계엄군 모습에 대해서도 “마치 체포할 것처럼 (애기) 하던데...아마 퇴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영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피청구인 나오셨습니까”...尹, 일어나 ‘꾸벅’

### 탄핵심판 3차 변론...비공개 출석 대기 후 1시 58분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은 약 50분이 지난 오후 1시 58분께다.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시간에 맞춰 들어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작석했다.

/연합뉴스

## 국조특위, 합참·수방사 병커 현장 조사...“50여명 구금 검토”

### “여인형, B1병커 특정 지시...적당치 않다 보고에 활용 무산” 野 “尹, 청문회 불출석시 구치소 찾을 것”...與 “일방적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 전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 계엄상황실에 이어 수방사 B1 병커를 차례로 둘러봤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국회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수방사 B1 병커는 계엄군에 체포된 정치인들의 구금 장소로 검토된 공간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날 현장 조사 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계엄 당시 B1 병커에 50명 가량의 구금을 검토한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 의원은 “B1 병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

다”며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 30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 B1 병커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진 장관 등의) 공소장엔 체포·구금 대상 주요 인물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등 14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검토됐던 인원은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기밀수사실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B1 병커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실제 부른 명단은 14명이었지만 B1 병커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50여명이라고 보고되며 연락하게 된 것 같다”며 “방첩사 관계자가 (여 전 사령관에게) 구금 시설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해 B1 병커는 활용하지 않은 것

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군사기밀수사실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인원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구금시설로 쓰기 부적절한 장소라고 말해 (병커 사용이) 무산됐다고 (오늘)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계엄 당시 지휘부 회의가 이뤄진 합참 지휘통제실도 방문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첫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 출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청문회는 다음달 4일, 6일에도 열린다.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증인·참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

인에 나설 뿐 아니라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엔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씨도 예외는 아니다. 국조특위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출석요구가 본인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출석을 기어코 거부하면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일방적 증인 채택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다수 야당의 통 큰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어 그는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 검찰, 서부지법 폭동 46명 구속영장 청구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가물을 파 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6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수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선 전날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 헌재 앞尹지지자들 “밀고 가자”...경찰 폭행 1명 체포

21일 오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자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격앙됐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현장에 배치된 일부 경찰 기동대원은 헬멧과 방패, 진압복을 착용하고 캡사인 분사기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원된 경찰차량은 192대다. 헌재 주변엔 차벽이 겹겹이 쳐졌다. 헌재 방면 시야를 가리기 위해 높이 4m 가량의 폴리스타인도 설치됐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대통령님 못 보게 하려고 차벽을 쳤다”, “부정선거 척결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한 중년 여성은 오후 1시 30분께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 저지를 뚫으려다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되기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평화 시위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